

법과 원칙 중시가 국민통합의 바탕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자유사회에서 국민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이를 표출하는 행위는 사회발전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이를 문제시해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려다가는 오히려 재앙을 부른다.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전체주의 악몽도 떠오른다.

국민통합이라는 구호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정책목표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 정치가 원활히 작동하면 국민통합은 자연스레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통합을 앞세우는 정치는 부질없거나 오도된 길을 걸을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규칙을 지키는 사회에서는 국민통합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권위적 집단문화가 뿌리 깊다. 개인의 생각은 무시되고, 사회가 개인을 대신하거나 집단적 선택을 강요한다. 그런 사회에서 남과 다르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잘못 튀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다. 이처럼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억눌린 상태는 저항을 부른다. 국민통합에 앞서 개인이 자유로운 사회로 좀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사회발전을 이뤘지만, 아직 획일적 집단주의라는 역사적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견교환보다는 권위주의 방식의 상하관계,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보다는 관준민비 방식의 통제적 질서가 잔존한다.

뻣뻣하고 경직된 의사교환 방식은 거친 사회문화로 드러난다.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과 다툼은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은 아직 서툰 수준이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빈발하고,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변명이 용인되는 일이 흔하다. 심지어 정치엘리트가 모여 있는 국회에서조차 관용과 대화가 실종되는 일은 다반사고 폭력까지 발생한다.

폭력과 우격다짐이 해결방식의 중심이다 보면 사회는 신뢰와 규칙이 무너진다.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사회자본을 갉아먹는다.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대화도 의미를 잃는다.

이런 문화에서는 흔히 혁신보다 혁명적 방식을 높게 평가하곤 한다. 대개 혁명은 사회 발전을 단번에 이루겠다며 폭력적 수단을 합리화하여 부작용과 장기적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기회를 포착해 효율적으로 일을 실행하라는 뜻인데, 이를 단숨에 해치우라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시대적 환경이 변하듯 국민의 여론도 늘 변한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일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이에 실패하는 경우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는 국민통합 과정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정치행위가 바로 국민통합의 요체인 셈이다.

민주주의는 다름과 다툼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민주사회의 일원은 다수결원칙이든 법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런 승복과정이 축적되면서 성숙해진다.

과거 촛불시위는 대통령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거결과를 부정하며 부정선거라고 몰아가는 세력이 나왔고, 패배한 정당은 이런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민주주의가 흔들린 일이며 국론분열을 자극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정치인들이 민주적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되며 투표로 결정하는 성숙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행스럽게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은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바탕이기도 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줄일 필요가 있다. 폭력과 불법 행위를 용인하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나아가 신용문화를 성숙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시스템을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중앙 정부 위주에서 지방 정부 위주로 전환하는 것도 근본적 처방이 된다. 큰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갈등을 키우며, 중앙정부는 소모적이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을 작은 단위로 지방화하다 보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 및 지원정책 그리고 복지관련 예산과 지출을 모두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국민끼리 다투도록 유도하는 정치는 타락한 정치다. 비례대표제와 정당투표제가 그런 정치인들을 양산해왔다면 이를 개혁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정당정치가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